

# 특검 “최순실, 뇌물죄 등 추가 입건”

### “추가 소환 불응 시 강제 구인 방안 검토”... “최씨 일가 재산 형성 과정 확인 작업 계속”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뇌물죄 등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 중이다. 9일 밝혔다.

최씨가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고 있는 만큼, 추가 소환 통보 후 불응 시 이월 혐의를 적용해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최씨는 업무방해 혐의나 뇌물죄 등 몇 가지 혐의로 입건 된 상태로 알고 있다”며 “입건된 혐의가 몇가지인지는 밝히기 어렵지만,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

한 상태”라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달 29일 특검팀 조사 이후 ‘건강상의 이유’ ‘정신적인 충격’ 등을 이유로 특검팀의 소환 요청에 불응한 바 있다. 이날 역시 특검팀이 오후 2시 출석을 주문했지만,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사를 특검팀에 전달했다.

특검팀은 최씨의 거듭된 소환 조사 불응으로 수사 일정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 새로운 혐의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최씨가 이날 제출한 불출석사유서의 경우 참작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향후 최씨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최씨가 오늘 탄핵 심판 출석, 형사 재판 출석 준비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특검에서는 일부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생각해 재판 이후 다시 부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근령씨의 남편인 신동욱(49) 공화당 총재를 소환 조사하는 등 최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특검팀은 금융감독원에 요청한 최씨 주변인물 40명에 대한 재산 내역 일부를 넘겨받아 조사 중이다. 최태민씨의 의붓손자, 최씨의 이복 오빠 최재석씨 등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특검에서는 일부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생각해 재판 이후 다시 부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

**노승일 “최순실,朴과 통화 목격”**

노승일 전 K스포츠택단 부장은 9일 독일에서 최순실씨가 한차례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노 전 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특위 마지막 청문회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씨가 대통령과 통화하는 것을 목격한 적 있느냐’고 질문하자 “독일에 있을 때 한차례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 “(최씨가) 독일에서 저한테 자주 전화했는데 한국 동향을 물어봤다. 제가 설명하다 ‘아담에서 우병우 나가라고 압박한다’고 했더니 최씨가 ‘우병우 수석은 또 왜 그래’라고 했다. 이게 전부”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씨와 우 전 수석이 아는 관계라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경숙 전 이화여자대학교 체육대학장과 관련해서는, “(최씨가) 더불어민주당 사무실에서 통화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학장은 지난 4차 청문회에 출석해 “최순실을 모른다”고 부인한 바 있다. /뉴스

## “현안 해결에 정치력 집중”

### 국민의당 국회의원 신년 기자회견

국민의당 소속 도내 국회의원들이 전북 현안 문제 해결과 정책과 공약 통한 전북 발전, 계파패권주의 청산 등에 정치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정동영, 조배숙, 유성엽, 김중희 의원은 9일 도의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은 국민의당의 정치적 고향”이라며, “도민들이 염원하는 정권교체에 국민의 당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원들은 군산 현대조선소 쏬지와 전주 종합경기장 문제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대선공약에 반영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특히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을 받판으로 금융허브 전북, 연기금 메카 전북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개헌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정동영 의원은 분권형 개헌을 강조하면서 “개헌을 거부하는 세력은 반 호남세력”이라며 “개헌을 반대하는 문재인 전 대표도 정산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소속 도내 국회의원들이 9일 도의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은 국민의당의 정치적 고향”이라며, “도민들이 염원하는 정권교체에 국민의당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봉기 문재인 전 대표”라며 공격했다. 분권형 개헌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인재용 기자

유성엽 의원은 “개혁의 핵심은 개헌이며,

## 노승일 “최순실, 다량의 수면제 독일 가져가”

노승일 전 K스포츠택단 부장은 9일 “독일에 갔을 때 물건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최순실씨의 소지품 중 수면제가 다량으로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 전 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특위 마지막 청문회에서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씨가 청와대에 수면제를 가지고 들어갔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는 부분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최순실씨는 조카 장시호씨와 함께 신경안정제, 수면제 등으로 추정되는 약품을 복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노 전 부장은 최씨를 독일에서 수행하던 남성들에 대해 “제가 있을 때는 네 명, 다섯 명 정도 있었고 제가 독일에서 들어온 게 시간이 꽤 흘렀다. 3명은 지금 알고 있다”며 “정유라의 말을 접할 관리하는 이진희 말 관리자, 현재 비핵에서 회계 처리 업무담당 장남수 대리, 운영식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

## 심상정 “다음주 대선 출마 선언”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9일 “다음주 중반쯤에 출마선언을 하려고 한다”며 대선출마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기자단 오찬을 갖고 “날짜는 수요일 전후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이번 대선은 결국 촛불민심을 대변하는 길이다. 시민발언대에서 많은 청년, 여성,노동자가 박 대통령이 퇴진한다고 해서 내 삶이 달라지나 많은 문제제기를 했다”고 말한 뒤, “이 문제에 응답하는 정의당이 되려고 한다. 그것이 저희당 대선 기조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와 정의당이 집권해서 만들 정부가 노동 의제를 국가 제1의제로 삼을 때 격차해소가 가능할 것”이라며 “추상적 수준에서 양극화 해소를 이야기하는데 답안지 보면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라 딱같은 하나하나 이야기”라고 정치적 전체를 비판했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해법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재벌3세 세습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정의당이 집권하면 재벌3세 세습은 더이상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

# 장명식 도의원, AI 예방 전담기구 설치 주장

### “밀식으로 면역력 약화돼 피해 키워... 밀식사육 중단·대대적 시설개선 해야”

전북도의회 장명식 교육위원장이 지난 2003년부터 매년 반복되고 있는 AI의 예방 행정 강화와 이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를 촉구했다.

장 위원장은 9일 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역대 가장 심각한 AI로 축산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전북도의 특별한 대책을 주문했다.

장명식 위원장은 AI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도한 밀식사육을 중단하고, 시설이 열악한 오리와 닭 농장에 대한 대대적인 시설개선, AI예방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사육농장의 오리들은 수영할 줄 몰라 익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닭들은 A4 용지 크기보다 작은 철장에서 일생을 마치고 있다”며 “AI는 이런 농장 현실 때문에 빠르게 확산했다”고 지적했다.

9일 기준으로 전북에서는 31개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260만수가 넘는 닭과 오리 살처분했다.

살 처분 농장이 모두 과도한 밀식과 시설이 매우 열악한 오리와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집중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위원장은 현재까지 살처분한 농장의 보상금만 320억 원에 이르고 있고, 살처분과 방역 등에 투입된 인력과 비용을 생각하면 예방적 조치가 훨씬 더 적은 비용이 든다고 주장했다.

AI 예방을 위해 장명식 위원장은 “전북도의 동물위생연구소를 확대 개편해 AI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예방대책과 방역활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재용 기자

그 결과 동물들이 면역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반면 철새들은 AI에 걸리지만 집단 폐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 위원장은 철새와 달리 사육농장의 닭과 오리는 집단폐사는 물론이고 인근 농장까지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후예방문 식 처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예방행정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장 위원장은 현재까지 살처분한 농장의 보상금만 320억 원에 이르고 있고, 살처분과 방역 등에 투입된 인력과 비용을 생각하면 예방적 조치가 훨씬 더 적은 비용이 든다고 주장했다.

AI 예방을 위해 장명식 위원장은 “전북도의 동물위생연구소를 확대 개편해 AI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예방대책과 방역활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재용 기자

## 조운선 “특검만 알 것... 왜 나 소환 안하나”

조운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9일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건, 제 생각엔 특검이 모든 사람을 조사해서 특검만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최순실 국정특위 7차 청문회에 출석, “저는 그 작성 경위와 누가 작성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금도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까지 모든 사람들을 조사한 특검이 왜 나를 빨리 소환해서 밝히지 않는지 의아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는) 정무수석의 업무가 아니었다”며 “인수인계를 받은 적도 없고 보고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응답에서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실상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한 데 대해서는, “지금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보도된 상황에 결론적으로 있었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블랙리스트는) 전혀 본 적도 없고, 실행과 작성에 관여한 적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뉴스

## 민주당 당헌당규위 구성... 대선 준비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9일 조기 대선에 대비한 경선 틀 마련을 위해 당헌당규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는 등 대선 준비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를 열고 당헌당규위 간사에 금태섭 전략기획위원장을 임명했다. 3선 백재현, 재선 한정애·홍익표, 초선 박정·신동근·안호영 의원이 당헌당규위원으로 선임됐다. 위원장은 양승조 의원이 맡고 있다.

외부사로는 박상철 경계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박희승 변호사, 김유은 한양대 교수가 합류했다.

이외관련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특정 후보 캠프에 적극 참여하는 분들은 배제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안희정 충남지사 캠프에 합류한 백재현 의원의 참여에 대해서는 “한에 하나 다른 캠프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설명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당내 대선 경선 틀 마련 작업에 착수하고, 설 연휴 전까지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내에는 유력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의원 등 대권 주자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해 12월 캠프별 대리인들을 통해 각 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1월 초까지 경선 틀을 마련할 방침이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논의가 연기됐다.

민주당은 기본적인 경선 틀의 틀을 먼저 갖추고, 이에 대한 주자별 의의제기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뉴스

## 朴 대통령 측 ‘세월호 7시간 행적’ 오늘 현재 제출 예정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의 행적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오는 1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인 오늘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세월호 당일 행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대리인단에 최종 의견을 내고 내용을 직접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도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 행적 자료를) 10일까지 내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현재는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1차 준비기일에서 생명권 침해와 관련해 사실 관계 확정을 위해 박 대통령이 직접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이진성 재판관은 “7시간 동안 피청

구인(박 대통령)이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했는지, 박 대통령이 그동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봤는지, 업무 중에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시간별로 밝혀달라”고 말했다.

7시간 행적 논란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공식 보고라인에 있었느냐는 게 의혹의 요체다.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은 외국 언론인까지 한국 법정에 설 정도로 민감한 이슈였다.

특히 세월호 7시간 행적은 현재가 5가지로 정리한 탄핵소추 사유 중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탄핵심판의 중요 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현재에서도 그것(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변호인단에서 그것을 다 정리·추가하고, 지금도 만들고 있다”며 “제출을 하면 현재에서 재판하게 될텐데 이번 만큼은 그런 허위가 완전히 걸어졌으면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할 자료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행적이 분(分) 단위로 상세히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지난해 11월 홈페이지의 ‘오보·과담 바로잡기’ 코너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32차례에 걸쳐 유선과 서면 보고를 받았으며 주로 관저 집무실을 이용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같은 내용들을 기본으로 박 대통령이 관저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시간대별로 자료에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